

EDCF ISSUE PAPER

EDCF 이슈페이퍼 2020년 9월

채무구제에 대한 ODA 계상방식 관련 OECD DAC의 합의내용 및 시사점

한국수출입은행 경험총괄부 정책연구소팀
김지용 심사역

contents

1. 배경
2. 최종 합의내용
3. 산출방식_사례를 중심으로
4. 시사점

1. 배경

‘14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규모 측정시 자금조달 비용, 위험수준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증여율 수준이 높은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ODA 현대화”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 결과 ‘18년부터 ODA 산출 기준을 순지출(net disbursement) 방식에서 증여등가액(grant-equivalent basis) 방식으로 변경하고 수원국의 소득수준에 따라 할인율 및 증여율 조건을 차등화하여 적용하고 있다¹⁾.

< ODA 통계기준 주요 변경내용 >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ODA 적격기준	증여율* 25% 이상 (할인율 10%)	수원국의 소득수준에 따라 증여율 및 할인율 차등 · 저소득국/최빈국(LIC/LDC): 45% 이상(할인율 9%) · 하위중소득국(LMIC): 15% 이상 (할인율 7%) · 상위중소득국(UMIC): 10% 이상 (할인율 6%)
ODA 측정방식	순지출 방식 (총지출액-총원금회수액)	증여등가액 방식 (‘총지출액×증여율’ 혹은 ‘총지출액-상환원리금의 현재가치’)

* grant element, (차관금액-상환원리금의 현재가치)/차관금액

채무구제의 ODA 계상 논의는 이러한 ODA 현대화의 일환으로, ‘18년 적용을 목표로 ‘17년부터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인정한도 적용 등에 대한 회원국간 이견으로 합의가 지연되었다. 그러나 ‘20년 DAC-파리클럽(Paris Club)²⁾ 공동 작업반을 설치, 합의도출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여 ‘20. 7. 24자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

2. 최종 합의내용

채무구제(Debt Relief)란 기존 대출을 전부 혹은 일부 탕감(forgiveness, 면제)하거나 재조정(rescheduling, 만기연장 등 대출조건 변경)하여³⁾, 수원국에게 추가

- 1) 할인율 및 증여율은 채무불이행 리스크 변동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될 계획임(2023년 예정). 한편, 민간지원수단(Private Sector Instruments: PSI) 등에 대한 증여등가액 산출방식은 여전히 논의 중이며, 합의가 이루어지 전까지 기존의 순지출 방식으로 ODA를 계상하고 있음.
- 2) 국가가 공여하거나 지급보증한 중장기 채권의 채무구제를 위해 결성된 채권국 모임으로,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2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음.
- 3) Any action officially agreed between creditor and debtor that alters the terms previously established for repayment. This may include forgiveness(extinction of the loan), or rescheduling which can be implemented either by revising the repayment schedule or extending a new refinancing loan(OECD).

적인 자금여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DAC 회원국과 파리클럽은 이러한 채무구제의 증여등가액 방식 ODA 산출시 ① 채무구제 시점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출하되, ② 인정한도 이내 수준으로, ③ '18년 전후 대출에 대해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때 중복·과대계상(inflation) 방지, 계산방식의 단순화(simplicity), 향후 채무재조정에 대한 유인(incentive) 제공, 여타 금융지원 방식과의 중립성 유지가 판단기준이 되었다.

< 채무구제의 ODA 계상방식 합의내용 >

구 분	내 용
시간가치(Time Value) 반영	채무구제 시점을 기준으로 수원국의 소득수준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 산출(원금, 이자, 지연이자 포함)
인정한도(Ceiling) 설정	≤최초 대출의 집행(명목)금액
2018년 이전/이후 대출의 구분	동일한 계상방법 적용

<참고> 채무구제의 ODA 보고방식 변경내용

기존의 **순지출 방식**에서는 명목금액을 기준으로 ODA를 보고한다. ODA에 대해 채무구제가 발생하는 경우 탕감(혹은 원금화)된 이자, non-ODA에 대해 채무구제가 발생하는 경우 탕감(혹은 ODA 조건에 부합하는 조건으로 조정)된 원리금을 신규 ODA로 인식한다(만기연장 건의 경우 ODA 보고금액 '없음').

그러나 **증여등가액 방식**에서는 채무구제 유형과 관계없이 추가적인 증여등가액 발생분 즉, 순현재가치 변화분을 ODA로 인식한다. 명목금액의 변화가 없는 만기연장 역시 대출의 순현재가치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추가 ODA로 인식할 수 있다.

<채무구제의 ODA 보고방식 주요 변경내용>

구 분	순지출 방식		증여등가액 방식 ODA, non-ODA*
	ODA	non-ODA*	
채무탕감	탕감된 이자**	탕감된 원리금	채무구제 시점 기준, 증여등가액 추가 발생분 (단, 집행(명목)금액 이내)
채무재조정	원금화된 이자	조정(경감)된 원리금	

→

* non-ODA 채무에는 기타공적채무(OOF), 공적수출신용 등이 포함되며, 동 채무가 채무구제 실시 이후 ODA로 전환되는 경우 이중계상 방지를 위해 기존 OOF 등으로 보고된 금액은 상계
 ** 원금은 대출집행 시점 既계상되었으므로, 채무탕감 시점에는 이자만 추가 계상

(1) 시간가치(Time valuation) 반영

승인·집행 시점과 채무구제가 발생하는 시점의 차이를 반영하고, 통계적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채무구제 시점을 기준으로 수원국의 소득수준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여 최초 대출과 채무구제 후 대출의 증여등가액 차액을 ODA로 계상한다. 증여등가액 산출시 대출의 원금, 이자와 함께 지연배상금도 산출대상에 포함한다.

(2) 인정한도(Ceiling or Cap)

인정한도는 대출을 집행하고 이후 채무구제를 실시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무상지원을 제공하는 경우와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종전까지 인식한 누적 ODA와 채무구제 후 인식하게 되는 추가적인 ODA의 합이 최초 대출집행(명목)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설정되었다.

파리클럽 및 일부 회원국은 한도설정에 대한 통계적 근거가 부족하며, 향후 채무구제 유인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⁴⁾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채무구제 확대 가능성 등 조속한 합의 도출 필요성에 공감하여 인정한도를 포함한 최종 합의안에 동의하였다.

<참고> 채무구제의 ODA 한도적용과 관련한 논의내용

최초 DAC에서는 '18년 이후 집행된 대출의 경우 증여등가액 산출시 적용되는 할인율에 채무불이행 리스크가 반영된 점을 고려하여, 채무구제시 추가적인 ODA를 인식하지 않는 내용의 협의안*을 제시하였다.

* '18년 이전 집행된 차관의 경우 탕감된 이자 혹은 재조정 이후 증여등가액(기존채무는 상계)을 추가 ODA로 인정

<최초 채무구제의 ODA 계상방식 변경(안)>

구 분	ODA	
	'18년 이후	'18년 이전
채무탕감	신규 및 추가 ODA 없음	탕감 이자를 ODA로 보고
채무재조정		재조정 이후 증여등가액을 ODA로 보고 단, 기존채무 상계

4) 특히 '18년전 승인·집행된 대출 중 상황에 따른 차감계상이 적은 경우, 지연배상금 누적액이 많거나 동일 대출에 대해 잦은 채무재조정(특히 이자의 원금화)이 발생했던 경우는 이미 인식한 누적 ODA 금액이 많다. 따라서 인정한도 적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ODA 계상금액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 본 글 '3. 산출방식' 사례를 중심으로'에서는 상황에 따른 차감계상이 없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파리클럽 및 일부 회원국은 '18년 이후 ODA에 대해 채무구제 역유인(disincentive)을 제공하며, 공여국의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타협안으로 채무재조정으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증여등가액을 ODA로 인식하되, ODA 과대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인정한도 내용이 포함되었다. 즉, 인정한도는 통계적 합리성보다 정치적인 이유로 결정된 측면이 강하다.

(3) '18년 전후 대출의 처리기준

순지출 방식에서는 대출 집행금액을 (+)ODA로 인식하고, 상환금액은 (-)ODA로 인식한다. 따라서 대출 상환이 완료되면 누적 ODA는 '0'이 된다. 그러나 '18년부터는 변경된 통계방식(순지출→ 증여등가액)이 적용되어 상환금액은 더 이상 ODA에서 차감계상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동일한 1억불의 대출(1년후부터 상환개시)이 집행되더라도 '17년 집행되는 경우 1억불이 ODA로 계상되는 반면, '18년 집행되는 경우 1억불에서 상환금액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이 ODA로 계상된다. 상환금액은 동일하게 ODA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즉, '17년말까지 잔액이 있는 대출 중 '18년부터 상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출은 일종의 ODA 혜택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ODA 과대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동 대출에 대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접근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복잡한 계산방법 등을 우려하여 최초 대출의 승인, 집행시점과 관계없이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3. 산출방식_사례를 중심으로

최초 대출의 승인시점, ODA 여부, 채무구제 유형을 기준으로 총 8가지 사례로 구분할 수 있다.

구 분		채무탕감	채무재조정
'18년 이후	ODA	①	②
	non-ODA*	③	④
'18년 이전	ODA	⑤	⑥
	non-ODA*	⑦	⑧

* 기타 공적채무(OOF), 공적수출신용 등

(1) ODA에 대한 채무구제 실시

i) 2018년 이후 집행된 경우 (case ①, ②)

저소득국(LIC)에 승인금액 100억불, 금리 2.0%, 만기 20년(거치기간 6년)의 대출이 일시 전액집행되는 경우 동 대출의 증여율은 50.6%이므로 저소득국 앞 ODA 인정기준인 최소 증여율 45% 이상을 충족한다. 따라서 최초 대출 승인·집행 시점 증여등가액인 50.6억불 만큼 ODA로 계상한다.

<최초 대출내용>

- 승인·집행금액: 100억불, 금리: 2.0%, 만기: 20년(거치기간 6년)
- 수원국: 저소득국(LIC) → OECD DAC 기준에 의거, 할인율 9% 적용
(단위 : 억불)

기간(t)	잔액	상환원금 (A)	상환이자 (B)	총상환금액 (C=A+B)	할인율 (D=1/1.09 ^t)	상환액 현재가치 (C×D)
1	100.0	-	2.0	2.0	0.9	1.8
2	100.0	-	2.0	2.0	0.8	1.7
3	100.0	-	2.0	2.0	0.8	1.5
4	100.0	-	2.0	2.0	0.7	1.4
5	100.0	-	2.0	2.0	0.6	1.3
6	100.0	6.7	2.0	8.7	0.6	5.2
7	93.3	6.7	1.9	8.5	0.5	4.7
8	86.7	6.7	1.7	8.4	0.5	4.2
9	80.0	6.7	1.6	8.3	0.5	3.8
10	73.3	6.7	1.5	8.1	0.4	3.4
11	66.7	6.7	1.3	8.0	0.4	3.1
12	60.0	6.7	1.2	7.9	0.4	2.8
13	53.3	6.7	1.1	7.7	0.3	2.5
14	46.7	6.7	0.9	7.6	0.3	2.3
15	40.0	6.7	0.8	7.5	0.3	2.0
16	33.3	6.7	0.7	7.3	0.3	1.8
17	26.7	6.7	0.5	7.2	0.2	1.7
18	20.0	6.7	0.4	7.1	0.2	1.5
19	13.3	6.7	0.3	6.9	0.2	1.3
20	6.7	6.7	0.1	6.8	0.2	1.2
상환액 현재가치의 합계						49.4

- 증여율 = $(100 - 49.4) / 100 = 50.6\% > 45\%$ (저소득국 앞 최소 증여율)
- ∴ $ODA_1 = 100 - 49.4 = 50.6$ 억불

6년 경과 후 동 대출에 대해 채무탕감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탕감을 통해 추가적으로 제공된 금액을 ODA로 계상한다. 이는 채무탕감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탕감 후 증여등가액(154.7억불)과 기존 증여등가액의 현재가치(84.9억불)의 차액인 69.8억불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최초 인식한

ODA 금액(50.6억불)과 채무탕감 후 추가적으로 인식하는 ODA 금액의 합은 대출금액인 100억불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49.4억불**만 ODA로 인식할 수 있다. 채무재조정 역시 동일한 과정을 통해 ODA 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 채무탕감·재조정시 ODA 계산내역 >

☞ t= 6, 채무탕감 실시

(단위 : 억불)

기간(t)	잔액	상환원금 (A)	상환이자 (B)	총상환금액 (C=A+B)	할인율 (D=1/1.09 ^{t-6})	상환액 현재가치 (C×D)
1	100.0	-	2.0	2.0	1.5	3.1
2	100.0	-	2.0	2.0	1.4	2.8
3	100.0	-	2.0	2.0	1.3	2.6
4	100.0	-	2.0	2.0	1.2	2.4
5	100.0	-	2.0	2.0	1.1	2.2
6	-	-	-	-	-	-
상환원리금의 현재가치 합계						13.0

- 6기 기준 채무탕감 후 증여등가액 = $100(1.09)^6 - 13.0 = 154.7$ 억불
 - 6기 기준 기존 증여등가액(ODA_1)의 현재가치 = $50.6(1.09)^6 = 84.9$ 억불
 - 증여등가액 추가 발생분 = 154.7 억불 - 84.9 억불 = 69.8 억불
- 이 때 50.6 억불 + 69.8 억불 > 최초 대출금액 100억불(인정 한도)′ 이므로,
 $\therefore ODA_2 = 49.4$ 억불

☞ t= 6, 채무재조정 실시

- 만기연장(20→ 30년), 거치기간 6년 추가

(단위 : 억불)

기간(t)	잔액	상환원금 (A)	상환이자 (B)	총상환금액 (C=A+B)	할인율 (D=1/1.09 ^{t-6})	상환액 현재가치 (C×D)
1	100.0	-	2.0	2.0	1.5	3.1
2	100.0	-	2.0	2.0	1.4	2.8
3	100.0	-	2.0	2.0	1.3	2.6
4	100.0	-	2.0	2.0	1.2	2.4
5	100.0	-	2.0	2.0	1.1	2.2
6	100.0	-	2.0	2.0	1.0	2.0
7	100.0	-	2.0	2.0	0.9	1.8
8	100.0	-	2.0	2.0	0.8	1.7
9	100.0	-	2.0	2.0	0.8	1.5
10	100.0	-	2.0	2.0	0.7	1.4
11	100.0	-	2.0	2.0	0.6	1.3
12	100.0	5.3	2.0	7.3	0.6	4.3

< 생 략 >

28	15.8	5.3	0.3	5.6	0.2	0.8
29	10.5	5.3	0.2	5.5	0.1	0.8
30	5.3	5.3	0.1	5.4	0.1	0.7
상환원리금의 현재가치 합계						61.1

- 6기 기준 채무재조정 후 증여등가액 = $100(1.09)^6 - 61.1 = 106.6$ 억불
 - 6기 기준 기존 증여등가액(ODA_1)의 현재가치 = $50.6(1.09)^6 = 84.9$ 억불
 - 증여등가액 추가 발생분 = 106.6 억불 - 84.9 억불 = 21.7 억불
- 이 때 50.6 억불 + 21.7 억불 < 최초 대출금액 100억불(인정한도)' 이므로,
 $\therefore ODA_2 = 21.7$ 억불

동일한 사례를 기존의 순지출 방식 보고체계에 적용해보면, 우선 채무탕감 사례의 경우 최초 대출집행시 명목금액인 100억불을 ODA로 계상하며, 채무탕감이 발생하기 전까지 원금상환이 없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차감계상되는 ODA는 없다. 이후 6기 채무탕감 발생시 원금은 이미 집행시점에 既계상하였으므로, 채무탕감 시점에 결정되는 탕감이자인 2억불만 추가 ODA로 계상할 수 있다⁵⁾. 채무재조정 사례에서는 원금화된 이자가 없으므로, 채무재조정 시점 추가로 인식하는 ODA 금액은 없다.

<ODA에 대한 채무구제시 ODA 계상금액>

(단위 : 억불)

구분	기간	분류	순지출방식	증여등가액
채무 탕감	1	유상차관 집행	100	50.6
	2	채무탕감(탕감된 이자)	2	49.4
	전체 대출기간중 총 ODA 인정액		102	100
채무 재조정	1	유상차관 집행	100	50.6
	2	채무재조정(원금화된 이자)	-	21.7
	전체 대출기간중 총 ODA 인정액		100	72.3

ii) 2018년 이전 집행된 경우 (case ⑤, ⑥)

'18년 이전 집행된 대출이기 때문에, 순지출 방식에 따라 최초 대출집행시 100억불을 ODA로 인식한다. 이후 채무구제 시점(6기)까지 상황에 따른 ODA 차감계상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 시점까지 ODA 누적액은 100억불이다. 따라서 채무구제가 이루어지더라도 인정한도에 의거 추가적인 ODA를 인식할 수 없다.

5) The amount of the debt forgiveness grant is the **total amount of principal forgiven plus the interest due and in arrears**. Under this option, which is known as lump sum reporting, no entry should be made for future interest foregone(OECD, 2000).

(2) non-ODA에 대한 채무구제 실시 (case ③=⑦, ④=⑧)

종전 사례에서 금리(3.0%)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동일한 대출의 경우 증여율은 43.4%에 불과하므로 non-ODA로 분류되며, 최초 집행시점과 관계 없이 ODA로 계상되는 금액은 없다.

<최초 대출내용>

- 승인·집행금액: 100억불, 금리: 3.0%, 만기: 20년(거치기간 6년)
(단위 : 억불)

기간(t)	잔액	상환원금 (A)	상환이자 (B)	총상환금액 (C=A+B)	할인율 (D=1/1.09 ^t)	상환액 현재가치 (C×D)
1	100.0	-	3.0	3.0	0.9	2.8
2	100.0	-	3.0	3.0	0.8	2.5
3	100.0	-	3.0	3.0	0.8	2.3
4	100.0	-	3.0	3.0	0.7	2.1
5	100.0	-	3.0	3.0	0.6	1.9
6	100.0	6.7	3.0	9.7	0.6	5.8
7	93.3	6.7	2.8	9.5	0.5	5.2
8	86.7	6.7	2.6	9.3	0.5	4.7
9	80.0	6.7	2.4	9.1	0.5	4.2
10	73.3	6.7	2.2	8.9	0.4	3.7
11	66.7	6.7	2.0	8.7	0.4	3.4
12	60.0	6.7	1.8	8.5	0.4	3.0
13	53.3	6.7	1.6	8.3	0.3	2.7
14	46.7	6.7	1.4	8.1	0.3	2.4
15	40.0	6.7	1.2	7.9	0.3	2.2
16	33.3	6.7	1.0	7.7	0.3	1.9
17	26.7	6.7	0.8	7.5	0.2	1.7
18	20.0	6.7	0.6	7.3	0.2	1.5
19	13.3	6.7	0.4	7.1	0.2	1.4
20	6.7	6.7	0.2	6.9	0.2	1.2
상환원리금의 현재가치 합계						56.6

- 증여율 = $(100-63.8)/100 = 43.4\% < 45\%$ (저소득국 앞 최소 증여율)

∴ ODA₁ = 0

동 대출에 대해 6기 시점 채무탕감이 발생하는 경우 채무탕감이 이루어지는 시점의 잔액인 100억불을 추가로 발생한 증여등가액으로 본다. 즉, 100억불이 무상지원된 것과 동일한 것이다. 이때 최초로 인식한 ODA 금액이 '0'이었으므로, 6기에서는 100억불 전체를 ODA로 인식하더라도 인정한다(기준을 만족한다(순지출방식과 동일하게 non-ODA 채무가 ODA로 전환될 경우 이중계상방지를 위해 기존 보고액은 상계). 만약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증여율 조건을 충족할 때 증여등가액만큼 신규 ODA로 계상할 수 있다.⁶⁾

6) 단, OECD DAC 통계원칙에 의거, non-ODA에 대한 만기연장으로 증여율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시장 금리 수준(market terms of interest)의 대출은 ODA로 인식할 수 없다.

< 채무탕감·재조정시 ODA 계산내역 >

☞ t= 6, 채무탕감 실시

ODA₂ = 100억불

☞ t= 6, 채무재조정 실시

- 만기연장(20→ 30년), 거치기간 6년 추가

(단위 : 억불)

기간(t)	잔액	상환원금 (A)	상환이자 (B)	총상환금액 (C=A+B)	할인율 (D=1/1.09 ^{t-6})	상환액 현재가치 (C×D)
6	100.0	-	-	-	1.0	-
7	100.0	-	3.0	3.0	0.9	2.8
8	100.0	-	3.0	3.0	0.8	2.5
9	100.0	-	3.0	3.0	0.8	2.3
10	100.0	-	3.0	3.0	0.7	2.1
11	100.0	-	3.0	3.0	0.6	1.9
12	100.0	5.3	3.0	8.3	0.6	4.9

< 생 략 >

28	15.8	5.3	0.5	5.7	0.2	0.9
29	10.5	5.3	0.3	5.6	0.1	0.8
30	5.3	5.3	0.2	5.4	0.1	0.7
상환원리금의 현재가치 합계						53.7

- 증여율 = (100-53.7)/100 = 46.3% > 45%(저소득국 앞 최소 증여율)

∴ ODA₂ = 100 - 53.7 = 46.3억불

동일한 사례를 기존의 순지출 방식 보고체계에 적용해보면, 최초 대출집행시 non-ODA에 해당하기에 ODA로 계상되는 금액은 없다. 이후 6기 채무탕감 시점에 잔액 100억불과 탕감이자 3억불이 ODA로 계상된다. 채무재조정의 경우 재조정된 원금 100억불이 ODA로 계상된다.

<non-ODA에 대한 채무구제시 ODA 계상금액>

(단위 : 억불)

구분	기간	분류	순지출방식	증여등가액
채무 탕감	1	대출집행	-	-
	2	채무탕감(탕감된 원금)	100	100
		채무탕감(탕감된 이자)	3	
	전체 대출기간중 총 ODA 인정액		103	100
채무 재조정	1	대출집행	-	-
	2	채무재조정(재조정된 원금)	100	46.3
	전체 대출기간중 총 ODA 인정액		100	46.3

4. 시사점

최종 합의된 채무구제에 대한 통계기준은 시간가치를 고려하고, 채무구제의 실질적인 증여금액을 ODA로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既인식한 ODA 누적금액이 많은 대출의 경우 인정한도 적용으로 채무구제로 인식할 수 있는 추가적인 ODA가 없거나 적다. 따라서 동 대출에 대해서는 채무구제에 대해 역유인을 제공한다는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DAC 회원국 내에서 ODA 인식금액의 차이로 채무탕감 대신 신규 무상지원을 통해 기존 대출 상황을 요구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선호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⁷⁾. 이는 향후 파리클럽 내 채무구제 논의시 회원국간 이견 발생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일부 국가에서는 보건·의료 관련 재정지출을 충당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IMF 및 세계은행(WB)은 공동성명서('20. 3. 25자)를 통해 양자 공적 채권국의 저소득국에 대한 채무상환 유예를 제안하였으며, '20. 4월 G20-파리클럽은 IDA 적격국 및 기타 LDC⁸⁾의 채무상환을 유예⁹⁾하기로 결정(Debt Service Suspension Initiative, "G20 Action Plan")하였다. 유예방식은 순현재가치 중립적인 채무재조정 즉, 채무유예에 따른 현재가치의 변화가 없으므로, 당장은 동 이니셔티브 실시에 따른 ODA 계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고강도 채무구제가 필요한 국가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양자 ODA에서 채무구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18년(순지출 기준) 0.2%에 불과하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요한 ODA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파리클럽 회원국이며, 동시에 양자 ODA에서 유상차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18년말 기준 37.1%(순지출 기준)로 DAC 평균(5.1%) 대비 높은 편에 속한다. 따라서 향후 채무구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ODA 계상방법 변경에 따른 영향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7) 향후 DAC는 채무구제 통계방식 변경의 파급효과(채무구제 대신 신규 무상지원으로의 우회여부, 유무상 차관 비중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8) IDA 적격국: 1인당 GNI \$1,175미만인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곤란한 76개국
LDC(Least Developed Countries): 47개국, 3년 평균 1인당 GNI \$1,025 이하로 인구 7천5백만명인 국가중 UN이 3년마다 재지정(최근 지정일: '18.3월)

9) 채무국 정부가 차주인 경우 혹은 채무국 정부 보증부 대출('20. 3. 24 이전 발생건에 한함)을 대상으로 '20년 5. 1~'20. 12. 31까지 상환을 유예하며, 유예된 원금은 거치기간 1년 후 '22-'24년 동안 상환될 예정이다. 유예이자 역시 부과됨.

<참고자료>

조은진 (2019), ODA 현대화의 최근 동향과 향후 전망, EDCF.

OECD (2020), Reporting on debt relief in the grant equivalent system.

OECD (2018), DAC Working Party on development finance statistics.

OECD (2000), Handbook for reporting debt reorganisation on the DAC questionnaire.

www.oecd.org/dac

www.worldbank.org/